
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따른징계기준 등에관한규정

2017. 5. 16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이라 한다)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청탁금지법 제6조, 제8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위반한 덕성학원(수익사업체 소속직원 포함) 및 산하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의 요구)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징계기준)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 관련 제반규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, [별표1]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및 [별표2]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7. 5. 16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

비위 행위	형태
금액	300만 원 미만
	300만 원 이상 ~ 500만 원 미만
	500만 원 이상

직무관련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(연간 3회합산 300만 원)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	
수동적	견책
	견책 · 감봉
	감봉 · 정직
	능동적
	견책 · 감봉
	감봉 · 정직
	감봉 · 정직
해임	
금액에 상관없이 의례적인 명목의 금품을 지속(3회 이상)으로 수수한 경우	
수동적	감봉 · 정직
	정직 · 해임
	해임 · 파면
	능동적
	정직 · 해임
	해임 · 파면
	해임 · 파면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, 대가성을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
수동적	정직 · 해임
	해임 · 파면
	파면
	능동적
	정직 · 해임 · 파면
	해임 · 파면
	파면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, 직무와 관련한 처분을 한 경우	
	정직 · 해임 · 파면
	해임 · 파면
	파면
	수동적
	능동적
	해임 · 파면
	파면
	파면

주1) 수동 :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
주2) 능동 : 요구한 경우

[별표 2]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

조치 대상	조치 기준

사후 신고(3일 이상 경과 시)	주의 또는 3회 이상 시 경고
미신고	경고 또는 3회 이상 시 징계
(의도적인) 허위 신고	경고 또는 징계
초과금액 미신고, 미반환	경고 또는 징계